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팀 검사 협의 없이 참석 지적… “부장회의 결과 유출 등 특별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우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려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법 집행은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려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외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를 판단하는 것인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검 부장회의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체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혐의없음 판넨했다. 그러나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과 한동

수 검찰부장을 포함하지 않은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서 논의한 점 등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수사지휘대로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부장회의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원이 나왔고, 대검은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

/뉴시스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국주영은 도의원, 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푸드플랜수립’과 연계해 푸드플랜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행정이 모여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주)지역푸드플러스 정찬섭 대표는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 비전 하에 ‘먹거리 공공성 강화, 가족농 소득·일자리 창출, 지역활력 제고’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푸드플랜의 6가지 핵심전략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먹거리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진행에 지정토론이 이어져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정책에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점검으로 대체하고, 먹거리 현장을 제정·선포하는 것은 단순 일회성 행사이므로 조례에 담은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강유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본 조례안에 먹거리의 안전과 위생 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지역먹거리에 대한 개념을 전북 푸드플랜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도지사, 도교육감, 민간위원추천원 등 3명에서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추천원 등 2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시장 박경남 계장은 군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H/W는 지양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북먹거리연대 조성근 집행위원장은 전북먹거리연대에서 검토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주요 쟁점이 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먹거리 현장,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부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민주당 전주시의원 첫 의원 총회 개최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혁신하는 전주시의회”를 목표로 첫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k-뉴딜 정책발굴 대회 개최 ▲지역위원회별 원내 부대표 선임 ▲적극적인 자치분권 현안 대응을 위한 현안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가입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K-뉴딜 정책발굴대회를 통한 획기적인 뉴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소속 의원들은 뜻을 모았다. /김윤상 기자



서윤근 전주시의원 미안바 봄의 혁명 지지 표명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이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22일 “미안바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미안바 봄의 혁명 지지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미안바 군부에 미안바 국민에 대한 폭거를 즉시 멈추고 현저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선”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현장 소통 행정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2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가 방문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모범적인 의료사업을 펼치는 사회적기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2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가 방문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모범적인 의료사업을 펼치는 사회적기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다 2014년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지역 내 1,600명의 조합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 2명 중 1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진료,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쓰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훈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북도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의료사업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선도모델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부지사는 “전북도 역시 다양한 지역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원, 치과, 재가복지센터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전북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큰 과오 없이 성실 다룬 솔솔이 없는 점, 전북연구원장 후보자로서 기관에 대한 애정과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후보자가 학회장, 학장 등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언론 분야 교수로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 연구성과 제고 및 정책사업 발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전북농부산물, 새만금 개발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고, 명확한 전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실제 정책추진과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전북연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5일까지 도지사에 승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백복인 재연임 KT&G 규탄”

민주김수홍 의원,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22일 잠정마을 집단 압박 및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규명된 연초박(당배우제거)을 제공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KT&G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와 언론에 잠정마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김수홍 의원은 부도덕성과 비윤리적인 KT&G의 불상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KT&G의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KT&G에 대해 법을 방패로 삼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사실이 없다는 KT&G의 주장도 반박했다. KT&G는 자사 연구소를 통



해 연초박의 1급 발암 물질인 TSNA에 대해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KT&G가 비료공장에 공급한 연초박의 양을 보았을 때 기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로 사용했음을 몰랐을 것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KT&G는 8년간 2,420톤을 잠정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퇴비 원료로 공급했다. 김 의원은 KT&G의 무책임 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7일 잠정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의 백복인 사장 재연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 사장의 재연임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잠정마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무시의 책임회피를 KT&G가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호상 기자

매출규모 작은 영세 소상공 카드수수료를 추가 우대적용

이용호 의원, 법안 대표발의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를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는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 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

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를 적격비용 재산출을 위한 TF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영절벽이 코앞까지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